

증원 반발에 '의대교육 질 개선' 약속한 정부...유력 방안은

의료계 "2000명 한 번에 증원하면 실습·수업 질 떨어져" 정부 "증원해도 무리 없어...의대 교육 환경 개선할 것" 학생 정원 증원 맞춰 국립대 의대 교수도 1000명 증원 증원 수요조사 취합 후 '교육 질'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교육 질 개선'을 재차 약속하고 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증원하고 대학별 인프라 개선 수요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배정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마쳐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정원 배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인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이 한꺼번에 2000명 늘어나면 의학교육 질이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1대1 실습이 많은 의대 특성상 학생이 많아지면 정상적인 실습이 이뤄질 수 없고, 교

수 1명이 맡게 될 학생 수도 많아지면서 밀도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가 요구하는 적절한 정원 확대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0명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입장이다. 1980년대와 비교해 정원은 줄었는데 교수 채용은 크게 늘었고 교육여건도 상당 폭 개선했다는 게 주 논리다. 아울러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교육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재정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전국 40개 의대 학장·부총장 영상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자 의료 개혁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교원, 기자재, 시설 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가장 먼저 밝힌 윤곽은 국립대 의대 교수를 총원하는 방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KBS1 TV토론회에서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국립대는 서울대, 강원대, 충남대, 부산대 등 9곳으로 이 중 2011년 법인화가 이뤄진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대학 의대 교수 정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0명을 몇 년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증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대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오는 4-6월 실시되는 공무원 정기 직제에서 국립 의대 교수 증원을 본격 검토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증원에 맞춰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거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수 임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사립대는 정원을 배정할 때 교육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사립대의 경우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같은 경우 재단



에서 의지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작년 (수요조사 결과) 보니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대들은 (지원) 의지가 있었다"며 "이미 증속,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했다.

기자재(실습 장비), 시설, 강의실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대학의 수요를 받아보고 지원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별 정원 배분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투입 규모나 그 밖에 지원 방안도 현재로서는 가능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여건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기가 어렵다"며 "3월4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나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 질 개선은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광범히 확고하다"며 "행안부도 기재부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경북궁 수문장 교대의식 관람하는 관광객들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의식을 관람하고 있다.

경찰, 오늘부터 10주간 음주·난폭운전 집중단속 실시

정체구간에서의 꼬리물기·끼어들기도 단속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사상죄

경찰청이 오늘부터 10주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고위험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10주간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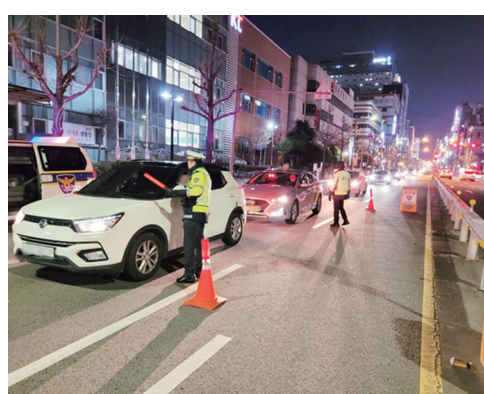
이 기간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고위험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경찰서는 음주사고 다발지역, 휴게 및 골목장 진출입로 등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학철에는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주간 음주단속도 벌인다.

고위험운전 단속을 위해서는 안전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양체운전에 대해서는 헬기나 드론 등을 이용한다.

이밖에도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시키는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도 단속한다.

중대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장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의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같은 고위험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면기자

총선 앞두고 재등판 '여가부 폐지론'

윤석열 대통령,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

한동안 잠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재등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갑작스럽게 수리하면서다. 김 장관이 잼버리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다른 정부 부처에서 실·국장급 인사들을 데려와 부처 폐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는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여성과의 역할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연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다시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자, 이대남의 표심을 재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성계는 윤 정부의 여가부 폐지 재추진에 2030 남성 표심 자극을 위한 포퓰리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를 지지했던 20대 남성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비화해 프레임에 씌우고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발끈하고 나섰다. 이대남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이 대표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조직법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 시켜주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집권 초기라면 폐지가 가능했다. 여소야대여서 여가부 폐지가 안됐다고 선동만 하고 실제로는 폐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일관성도, 진정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총선이 다가오니 다시 여가부 폐지 이유로 보수적 성향의 국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의도냐"며 "여가부 흔들기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론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새로운선택 등이 내세운 여성 병역 의무화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군 복무를 한 여성만 경찰·소방관·교정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병역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여성 징병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병역 평등 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이슈로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이것은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고, 여론몰이를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

김수권기자

완도 주택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 발생

완도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5일 완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8분께 완도군 금일읍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2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15㎡와

보관하고 있던 냉장고 등 내부 집기가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완도=송준표기자